



[주 52시간 D-10]
유례없는 근로시간 단축
달라지는 업계 풍속도
03



Economy

| | | | |
|----------|---------------------|-----------|--------------------------|
| 코스피 | 2340.11 (-36.13) | 코스닥 | 815.39 (-24.84) |
| 금리 (연평균) | 2.16 (-0.01) | 환율 (원/달러) | 1109.10 (+4.30) (19일) |

3대 비급여 폐지... 병원비 반값으로 확 줄었다

〈특진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재인 케어’ 체험해보니

MRI·초음파 등 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져
상급병실료도 내달부터 급여화
노인 틀니부담률 30%로 인하

#. 운동선수인 A씨는 골절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다인 병실에 자리가 없어 2인실을 이용한 A씨의 총 입원비는 160만원(10일). 직업 특성상 자주 다치는 A씨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상급병원 급여화를 통해 입원비가 절반(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을 덜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폐지되거나 크게 낮아져 체감 의료비가 확 줄었다. 메트로신문이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일산병원을 방문, ‘문재인 케어’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의료비 ‘뚝’
문재인 케어는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



경기도 일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왼쪽)과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보장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CT촬영을 하는 모습.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환자들의 큰 부담이었던 3대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해 연간 50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을 없앴다.

4월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기준과 수가를 개설했다. 그동안 일반병동에서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약 9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실에 입원하면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

료비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담당 간호사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간호사의 간병료도 올랐다”라며 “다만 일반 환자와 중증도 환자 등 서비스 분류를 세분화하고 간호·보조 등의 인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의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등급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등급 기준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줄어든다. 간호사 1등급의 경우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이 경감된다. 정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환자 부담금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초음파도 보험...‘보장성 혜택 체감해’

MRI·초음파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1조 4000억여원에 달하는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었다. 지난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적용,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 상복부 일반초음파는 평균 6만1000원~15만9000원에서 2만 8600원~5만8500원으로 부담이 줄었다.

이 밖에 노인 틀니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중증 치매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췄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였다.

이날 일산병원을 방문해 일부 보장성 강화 항목의 검사·진단을 체험해 본 최영아 씨(한림대·4학년)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이 많아졌다”며 “특히 소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교육원 관계자는 “간호·간병 서비스 등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北中정상, 올해 세 번째 회동 19일 관영 중국중앙(CC)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량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린 뒤 삼엄한 경비 속에 조어대(釣魚台)로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 3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베이징 조어대 오찬, 지난 5월 다롄 해변 거니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연합뉴스

자본유출 가능성 낮아 하반기 금리인상 시사

이주열 한은 총재 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면 (통화정책)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 총재가 직접 금리 조정의 조건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여건이 취약할 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 및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불안 외에 미·중 무역 갈등 심화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이 세계 교역 및 성장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역 전쟁)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는 현재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그 외 다른 요인을 고려해 하반기 금리인상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진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 경로 관련 “국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은

경제의 경우 여전히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최근 실물지표나 여러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국내 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도는 지난 4월 전망(3.0%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전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관련 자금 수요로 인해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대출자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차주로 파악돼 현재로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文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시행 1년

300만명 혜택 받지만... “기업엔 희생 강요”

〈취약계층〉

시장개입 논란 보편요금제 국회로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요금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 정

책의 ‘노른자’ 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제 정부는 오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할지 1년을 맞는다. 핵심 성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시행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이 꼽힌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제도의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맞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 유예도 시행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요금

할인 상향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207만명을 기록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시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로 신규 감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 및 어르신 약 174만명의 요금감면 수혜가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다만, 보편요금제 시행 등 정부의 대책이 고스란히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사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